

제 33 회 일본환경회의의 오키나와대회 제 6 분과회 선언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름 아래에 오키나와와 한국 등 많은 나라들과 지역에서는 평화, 환경, 인권이 위협당했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닌, 지역에 사는 한사람한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안전보장’을 요구한다. 특히 군사화에 의한 지역사회의 분단, 환경파괴, 인권침해에 강하게 반대한다.

진정한 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탈원전과 온난화대책으로써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추진,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를 주체로 한 삼림과 바다 등의 자원관리제도의 재구축, 환경교육 등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과 함께, 커뮤니티에 있어서 식량이나 에너지 등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경제적 수단으로 외부에 조종당하거나 구조적인 차별을 감수하는 일 없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한 지역공동체만들기를 지향한다.

또한 중국의 화남지방부터 홍콩, 대만, 오키나와, 조선에서 발전해온 풍수문화권의 역사적인 환경교류를 재인식하며 특히 젊은 세대의 환경교류를 추진해간다. 그리고 각 지역의 독자적인 역사, 문화, 언어를 존중하고, 서로 배워가는 노력을 계속한다. 각 정부는 그러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만 하며, 군비확산경쟁을 위한 군사비와 헛된 공공사업이 아닌 교육비와 사회보장비 등 사람들을 향한 투자를 확대해야만 한다.

류큐제도의 지역공동체 자원관리제도는 류큐왕조시대로 그 기원을 거슬러올라가, 류큐제도의 역사적인 구축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의 자연과 자원관리제도의 이해를 위하여 역사적 시점을 더해야만 한다. ‘류큐근대사’를 탐색하는 것과 함께 토지의 이력이 조성하는 역사적인 혼성물로서의 공유지(지역공동체의 공유지. 예를 들어 입회지나 해안에서 보이는 정도의 바다 등)를 볼 때, 지역공동체로부터 삼림이나 바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빼앗아 간 류큐처분기의 자연의 ‘처분’을 포함하여 다시금 그 재평가가 필요하다.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를 살륙과 전쟁에 의한 경제이익을 탐한 ‘군산관학보복합체’(‘보’는 미디어)의 희생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복합체에 선동되어 근린국가와 군비확장을 경쟁하는 것이 아닌, 환경분야를 시작으로 주변국가의 사람들과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군사협력과 역할을 강화한 ‘미일안전보장체제’, ‘한미안전보장체제’에서 아시아의 다국간과 다지역 사람들의 자결권, 인권, 환경 등에도 배려한 ‘진정한 안전보장’체제로의 이행,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공동체의 실현을 향해 그 노력을 시작하는 때가 바로지금 오고있다.

우리들에게는 스스로의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현재와 미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능력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각각의 지역 또한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협동을 시작할 것을 아시아의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호소한다.